

새정부 전략 '5극 3특' 추진 속도

김윤덕 국토부장관, 대통령 업무보고서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보고 양질의 주택 공급·공공기관 2차 이전·광역교통망 지방 중심 확충 등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2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이재명 정부에서 국토부가 역점 추진할 사업들이다.

김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빠르고 충분하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수도권 공공택지는 내년에 2만9000호 분양, 5만호 이상 착공에 들어가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심 유류 공간을 활용하고 민간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도심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공적주택 110만 호를 확실히 공급해 주거 사다리를 다



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꼽았으며 청년, 신혼 및 출산가 구 고려가구 등을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지방을 살릴 핵심적 과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라며 "내년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는 이전을 시작할 예정으로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국토부는 현재 350개 공공기관을 대

상으로 이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대통령 세중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임기 내 반드시 완공하겠다는 목표다.

새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15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정·조성을 신속화하고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광역교통망은 지방 중심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광역교통망의 지방권 비중을 현재의 두 배 이상으로 늘려 교통투자 방향이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며 "지방에 뼈대를 세웠다면 지역경제에 숨통을 띄우는 실제적 투자로 필요하다. 지역에 노후화된 사회간접자본(SOC)에 국가가 투자해 지방 건설경기가 살리고 일자

리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 사고 사망자 수가 전 산업의 40%에 달하는 점을 거론하며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해 뿌리부터 달라진 건설 현장을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또한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을 통해 항공 안전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고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 탐사활동 확대를 통한 싱크로 예방과 전동킥보드 관리 등 일상 안전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오늘의 약속을 제대로 완수하기 위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다"며 "국민을 바라보고, 국민과 자주 만나며, 소신있게 일하는 국토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희성 기자

“검찰·사법개혁 완수 내란 완전 종식 이끌겠다”

민주 이성운 의원, 최고위원 출마 선언



더불어민주당 이성운 의원(전주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 검찰·사법개혁 완수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내걸고 당 최고위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의원은 출마 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내란 가담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내란 세력은 더욱 노골적으로 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 저항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검찰 권력은 여전히 과거 정치검찰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을 겨냥해 '5월 1일 사법쿠데타 의혹으로 국민 의 선택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3대 특검 영장 기각 등으로 사법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정치검찰에 맞섰고, 윤석열 정부에서 해임된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에 앞장서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탄핵소추단으로 참여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이끌어낸 경험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이 될 경우 '민주회복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첫째로 검찰·사법개혁 입법의 완수를 제시하며 "내년 9월까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증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통해 '제왕적 대법원을 국민의 사법부도 바꾸겠다'고 했다.

둘째 과정으로는 내란의 철저한 청산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3대 특검 수사로도 밝혀지지 않은 의혹이 많다"며 "윤석열·김건희 관련 내란과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셋째로 조희대 대법원의 사법부 데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지, 5월 1일 파기환송 선고에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사위는 법개혁과 내란 종식의 최전선"이라며 "법사위와 당, 당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는 최고위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이 임탁이 될 때 가장 강하겠다"며 "내란 세력과 반개혁 세력을 단죄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정읍·남원·진안·임실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전북 지방의회 특위 “송전탑 아닌 미래 선택하라”

용인 반도체 산단 취소·새만금 이전 촉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싸고 전북 지역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와 정읍·남원·진안·임실군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새만금 RE100 국가산단으로 이전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영염선 도의회 외에도 윤수봉·김성수·박정규 도의원도 참여해 힘을 보탰다. 영염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는 서두에서 주민들의 현실을 먼저 꺼냈다.

영 위원장은 "송전탑 건설 계획으로 인해 전북의 수많은 주민들이 불안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한국전력의 일방적인 사업 강행에 맞서 끝까지 주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 각 시·군 의회와 시민사회, 주민대책위원회와 연대해 의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하겠

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정읍시의회 특별위원장은 에너지 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짚었다. 이 위원장은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지방에 송전탑을 세우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며 "전문가 토론과 검증을 통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송전탑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전은 송전선로 건설을 멈추고, 정부는 입지 이전이라는 근본적 해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현 남원시의회 특별부위원장은 국가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높였다. 김 부위원장은 "지방을 송전탑으로 뒤덮어 수도권의 배후기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지방으로 내려보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 전환의 철학은 전북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중앙정부와 당에 강력히 요구하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진 진안군의회 특별위원장은 현장의 절박함을 전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책상 위 논리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다"며 "매일 마을회관과 논밭에서 '송전탑 밑에서 어떻게 살라는 거냐'며 눈물 흘리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단순한 전력 공급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정중 임실군의회 특별위원장은 지방의원의 역할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지방의원의 첫 번째 소명"이라며 "송전탑 계획이 백지화되고, 용인 반도체 에너지와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기회의 땅으로 거듭날 때까지 주민들과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특별위원회는 공동 요구사항으로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 정책으로 역행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 즉각 백지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계획 취소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을 통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을 공식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조배숙 국회 의원에 12·3 계엄 사과·입장 표명 촉구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조배숙 국회의원에 '12·3 불법 비상계엄 시도'와 관련해 명확한 입장 표명과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 질의서를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당은 해당 사태를 헌정질서를 훼손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당시 국민의힘 다수 의원들이 침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및 계엄 시도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과 사과를 밝힌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상당수 의원들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도당은 조 의원에 불법 계엄 시도의 내란성 인정 여부, 윤 대통령과 극우 세력과의 정치적 단절 의사, 대국민 사과 의사 등 세 가지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전북도당은 끝내 입장 표명이 없을 경우 국민의힘을 '극우 내란 잔존 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정치적·역사적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전국 82개 국민의힘 지역위원회 앞에서 관련 규탄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만호 기자

“전북에 남긴尹 내란 끝낼 것”

‘도지사 출마’ 민주 안호영 의원, 새 전북도정 출범 강조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안주·진안·무주)이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고, 이재명 정부 철학에 맞는 새로운 전북도정 출범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에 남긴 윤석열의 내란을 끝내고, 이재명의 전북도정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내란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해 온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우발적 상황이 아닌 권력 유지를 위한 계획된 내란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적 국정 운영이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공격이었을 뿐 아니라, 그 피해가 지역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이 마비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지방으로 전가됐고, 전북과 새만금은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됐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특히 재생에너지와 그린뉴딜 정책 부진, 새만금 기본계획 폐기,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 정책 전반에서 전북을 체계적으로 배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전북에 약속했던 대신 공약 가운데 실제로 이행된 것은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단 한 가지에 불과하다"며 "전북에는 실망과 상처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전북에 가해진 구조적 내란'으로 규정하며, 내란 청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내란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청산하지 않으면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는 현재의 위협"이라며 "내란 청산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국가 운영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재명 정부가 역량부약, 기본사회, 재생에너지, AI 국가, 지역 주도 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국가 운영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국가와 철학이 바뀌면 지역의 운명도 바뀔 수 있다"며 "전북도정 역시 윤석열 정부가 남긴 폐해를 넘어서 새롭게 세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민주 도당, 전국위원회급·특위 위원장 대거 임명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도당위원장 윤준병)은 15일 제3차 운영 위원회를 열고 전국위원회급 각종 위원장과 인사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분야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며 당직 구성을 이어갔다.

도당은 전국위원회급 5개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각 분야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 전북지역 대표성을 두루 갖춘 인사를 선임했다. 노인위원회에는 전영배 전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대학생위원회에는 이장찬 전 도당 대학생위원장, 농어민위원회에는 노창득

한농연 중앙연합회 감사, 사회적경제 위원장에는 김현철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소상공인위원회에는 이철범 정읍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윤준병 위원장의 운영 방침인 '도민우선, 당원중심 도당'과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세대·직능·지역 현안을 아우르는 13개 특별위원회를 설치했다. 당원주권특별위원회(조지훈), 청년경제인특별위원회(신동이), 청년민생특별위원회(김인철), 미래경제정책특별위원

회(조충만), 골목경제성장특별위원회(조현수), 군산문화관광특별위원회(김영일),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채정연), 문화예술특별위원회(김숙영), 사회복지특별위원회(김신남), 중소기업특별위원회(조상중), 지방소멸대응특별위원회(양승민), 지방정책특별위원회(오철기), 농축산산업육성특별위원회(강성봉)가 각각 출범했다.

사무직 당직자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 위원에는 이재은 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임명됐으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에는 노인환 전 한국세무사회 이사, 부위원장에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의원이 선임됐다. /이만호 기자



도의원 8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전주 12)·김이재(전주 4)·이명연(전주 10)·이병도(전주 1)·이정린(남원 1), 정종복(전주 3)·진형성(전주 2)·황영석(김제 2)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15일, 도의회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의정협의회가 주최하는 훈격으로, 광역 시·도 의원 가운데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의원을 발굴하여 수여하는 상이며 이번엔 17회째를 맞이했다. 수여는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님이 직접 상패와 꽃다발을 전수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문승우 의장은 "제 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동료 의원님들의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은 도민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고 격려하며, "오늘 수상은 그 노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자, 앞으로 더욱 도민에게 봉사하라는 의미로 생각한다. 앞으로도 도민의 행복과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만호 기자